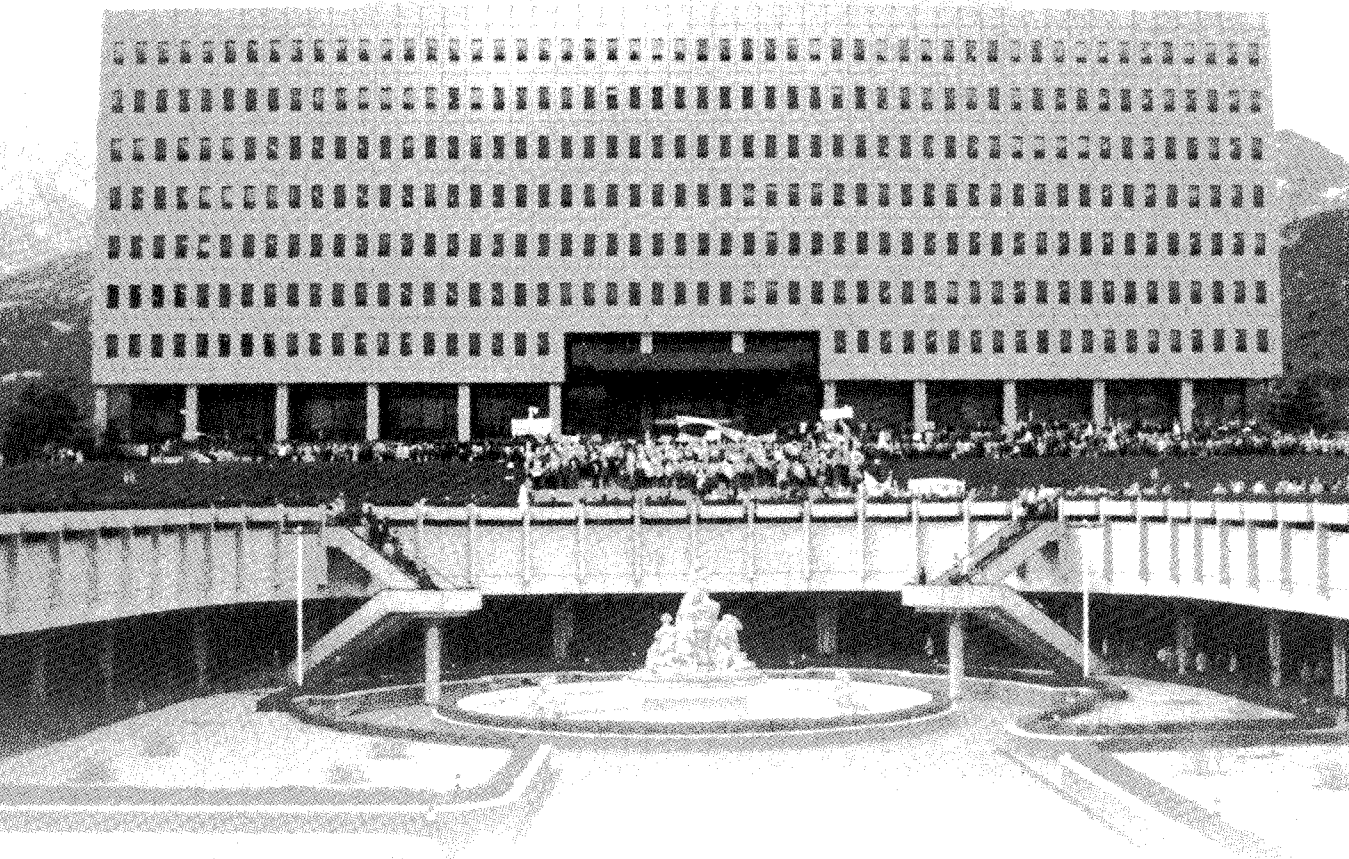


낙농업 발전 위한 중장기 정책수립 시급하다



김성인
한국낙농신문 편집국장

한 국 낙농업은 지금 표류하고 있다. 특히 낙농진흥회 소속 상당수 낙농인들은 지금 분노와 좌절속에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해 11월 잉여원유차 증가가격제가 실시된지 6개월만에 또다시 새로운 감산대책이 검토되면서 이들 낙농인들은 어찌 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진흥회 권역밖의 낙농인들도 유업체나 협동조합을 정점으로 독자적으로 원유 수급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들 역시 일정량의 원유를 감산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낙농은 수요보다 많은 원유 생산량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는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원유 수급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낙농인들이나 유업체들이 만족할만한 대안

마련을 하지 못한 채 모든 정책의 행정력이 진흥회의 잉여원유를 해결하는데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 낙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국민 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등의 불만 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발등의 불을 끄면서 동시에 물꼬가 터진 개방화 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대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시간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미 시작된 DDA농업 협상이 2004년 말에 타결된다면 2005년부터는 치즈나 버터, 혼합분유 등 우리 낙농업에 치명타를 가져올 모든 유제품의 관세가 크게 낮아진다. 오늘의 원유 과잉 사태의 원인도 치즈나 혼합분유의 수입 증가에 기인되고 있음을 볼 때 오늘의 원유 과잉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내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무서운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일본은 이미 지난 95년 WTO 협정이 발효되면서 자국의 낙농육우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2000



년부터 2010년까지 향후 10년간 낙농산업을 이끌고 나갈 '낙육 근대화 기본 방침'을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수립 공표했다.

앞으로 10년동안 장기 수요 전망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원유의 자급률과 원유 생산 목표를 수립해 적어도 정부가 낙농인과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낙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낙농인들 역시 정부의 이같은 의지에 따라 낙농 경영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경쟁력은 물론 합리적인 시설 투자 등을 계획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일본은 낙육 근대화 기본 방침에서 낙농의 장기 수요 전망을 우유의 경우

534만톤(연 0.5% 증가), 유제품은 773만톤(연 1.0% 증가), 자가소비 11만톤 등 총 1,318만톤(연 0.8% 증가)으로 잡고 있다.

원유 자급률은 현재 71%에서 75%로 끌어올리고 원유 생산은 연 1.25% 신장을 목표로 993만톤으로 책정했다. 지역별로는 가공원유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북해도 지역은 연간 2.75% 증가를 목표로 494만5천톤, 타 도부현의 경우 연간 0.25% 신장을 목표로 498만5천톤으로 책정했다.

2010년까지의 농가당 경산우 사양 두수도 북해도의 경우 50~80두, 도부현은 40~60두이며 두당 산유량 목표는 북해도는 7600~9000kg, 도부현은 8400~8600kg이며 생산비

는 북해도의 경우 kg당 52~54엔으로 현행의 80~83% 수준이다. 도부현은 64~72엔으로 현재의 79~86% 수준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리터당 53엔의 음용유 제조 경비를 2010년에는 80% 수준으로 낮추고 원료용 버터는 현재 kg당 166엔에서 70~80%, 탈지분유는 현재 25kg당 2,365엔에서 70~80% 수준으로 각각 낮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유가공공장의 활성화를 위해 음용유유의 경우 현재 350개 공장을 2010년에는 70~80% 수준으로 줄이고 유제품 공장은 현재 55개에서 60~70%로 줄여 전체 공장수를 현재 405개(일처리량 2톤이상 공장만 해당)에서 70~80% 수준으로 줄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HACCP 보급은 현재 전체 공장의 45%에서 70%이상으로 향상시킬 목표로 추진중이다.

정부, 유업체, 생산자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은 원유 등 생산목표 설정, 낙농인 소득 확보 정책, 생산자 지원 대책, 소비확대 대책 등을 마련 추진토록 했다. 유가공업체는 원유의 부가가치를 이용해 유리하게 판매하고 잉여원유의 공동



처리, 소비 확대 대책, 생산지도 대책 등을 마련, 추진하며 생산자는 양질의 원유를 공급하고 수급 동향 전망에 따라 생산을 실시하도록 서로간의 역할을 분명히 정했다.

일본 정부는 생산자 단체인 농협의 역할도 원유 집유판매의 경우 95%를 담당하고 유질개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생산 경영지도는 50% 정도, 생산자제 공급 50%, 가축진료 업무 30%, 원유 제조판매 실시 10%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2010년까지의 농협의 역할에 대해 낙농가의 기대에 부응한 조직으로서 원유 판매 중심에 의한 생산 대책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전체적으로 생산 경영지도(진료, 유질 포함) 단체로써의

역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했다. 특히 안정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생산자재를 공급하고 적정 원유 가격 실현을 위한 유가공업부문의 확충강화, 직영출자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역할 분담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키 위해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 가격지지 제도를 폐지하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고 낙농인 경영안정은 정책적으로 도모하고 보증가격, 기준거래가격, 안정지표가격 등은 폐지했다. 가공원료유 가격은 자유거래로 결정하되 당해 연도 평균 거래 가격이 과거 3년동안의 가공원료유의 평균거래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하도록 전환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생산자가

3대1의 비율로 부담하며 2001년도에는 정부가 1엔20전, 농가가 40전이였다. 그러나 농가들이 보전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생산자 단체와 '생산자 적립금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교부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원유 거래 제도도 경쟁에 의한 상대 거래를 기본으로 하되 용도별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규정을 설정하고 거래시 투명성을 확보하여 설명책임을 이행하고 공존 공영을 전제로 가격과 수급간에 공통인식을 배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동 검토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와 사업단은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협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원유 및 우유 유제품의 가격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전국 원유 수급계획을 설정하며 잉여원유 처리와 수송 경비 등 거래 비용에 대한 공동과제를 검토하여 수급 가격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유가공업체와 지정단체들은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원유 거래 교섭을 하며 3월까지 교섭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협의회 내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고 있다.

새로운 수급조정 계획생산 대책을 마련, 협조적 거래 조성을

위해 공동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유 수요 예측과 원유 수급계획을 책정하고 잉여원유 처리방법과 원유 수급에 대한 과제를 검토한다. 여기에서 탄력적이고 계획적인 원유 공급을 위해 전국 원유 공급계획 수량을 결정하고 지정 단체별로 원유 공급계획 수량을 설정하고 지정 단체의 용도별 판매 계획도 수립하여 계획 생산 요령을 결정토록 했다.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지정단체(집유조합)와 지정단체 전국연합은 월별 원유 배분계획을 책정 공시하고 수급 상황 등의 정보교환, 광역 수급조정을 실시하며 시장시세에 따른 효율적 원유 판매를 위해 지정단체와 유가공업체는 도도현에 가공 판매 불가능한 원유 생산은 억제하고 용도별 거래의 명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를 위해 원유 생산자단체와 유가공업 단체, 학자 등으로 '원유공급·가격조정 협의회(가칭)'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이 협회의 역할은 1분기의 원유 및 우유 유제품 수급가격의 변동 등의 정보를 공표해 지정 원유생산자 단체와 유업체가 원유가격을 교섭하는데 원할

을 기하는데 있다.

이 협의회는 이를 위해 음용유 가격, 발효유 가격, 특정유제품 가격에 대한 1분기의 유제품 가격 관련 정보와 1년간의 낙농가 원유 생산비 변화, 유업체별 제조비 변화 등에 대한 1년간의 정보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례해 해당 1분기의 가격변동을 공표하고 있다. 지정단체(집유조합)와 유가공업체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원유 가격 교섭을 단행해 투명하고 공정 정확한 원유 거래를 실현하고 있다.

일본의 '낙육 근대화 기본 방침'의 골자다. 일본은 이미 2000년에 향후 10년 동안의 낙농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낙농정책은 진흥회의 남아도는 잉여원유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발동의 불부터 끄는 것이 매사의 순서였지만 우리 낙농업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발동의 불도 끄면서 국민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한국 낙농 발전 중장기 대책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갈 길은 멀고 해는 계속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연락처 : ☎02)712-9080